월/요/광/장

최 병 식

미술대학, 이대로가면 다 죽는다

벌써 몇 년전부터 갈등이지만 대학의 취업률 통계를 내면서 공식적으로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실무자들과 예술분야 교수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그렇다면 순수예술분야의 경우 아무리 훌륭한 연주회나 전시회를 하여도 결국 실업자이고 취업률에서는 제외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순수예술분야는 졸업 후 대다수가 실업자소리를 들어야 하고, 대학에서는 우선 지원학과로 분류되기 어렵다. 교육방침대로라면 거의 0%에 가까운 취업률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졸업후 진로에 대하여 갈피를 잡지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갈수록 학생들의 강의가 어려워진다.

국내에는 우추죽순처럼 개설된 예술분야 대학의 학과가 그 숫자를 가늠하기가 어려울정도로 많다. 순수미술분야만해도 년간 5천 여명은 족히 될 법한 학생들이 매년 입학하고 있으니 재학생은 무려 2만여명이 된다. 디자인분야를 포괄하면 재학생 수가 5만명은 될 것이라는 추산이어서 인구비례로 보면 세계에서도 최상위에 속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자라나는 인재들의 미래를 위하여 총체적인 반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순수분야에서는 졸업후 예술분야의 속성상 스타작가로 부상하지않으면 당장 생계조차도 어려운데다, 그 확률은 1%정도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술분야에서는 시장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순수하게 작품판매만으로 작가생활을 하는 분포는 불과 300명도 안된다. 매년 배출되는 대학졸업생들 중에서는 불과 몇 십명 정도가 진출되며, 교직, 예비작가 등 순수미술분야 진출인력을 계산하여도 90%는 전공분야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안은 우선 순수미술분야의 대학정원을 대폭 감축함으로서 양적인 축소와 질적인 보완을 해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어서 미술계 스스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에서 전공과 연계된 인문, 사회학 등 학문적인 바탕을 튼튼히 하면서 자기경영의 예지를 길러가는 것이다.

많은 청년작가들의 초기 사회진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예술 외적인 요소들에 대응능력이 뒤떨어지며,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작품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가 부족하여 불과 1~2년을 견디지 못한다.

다음으로는 전문가로서 활약하기 위한 자기경영이 없다는 점이다. 오로지 실기에만 몰입하여 앞뒤를 살펴볼 겨를 없는 대학교육을 받다보면 어느새 생계대책이 없는 현실이 닥쳐온다. 많은 교수님들은 어려웠던 자신의 과거를 예로들지만 신세대들에게는 마이동풍일 뿐이다. 타 분야와도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 미국, 중국의 미술시장이 최근 엄청난 활황을 누리고 있으나 실제로 미술대학의 숫자를 세보면 놀라울 정도로 소수이다. 영국의 경우 많아야 10여 개 대학에 그치고, 미국은 숫자는 다소 많지만 작가들의 출신대학을 보면 비슷하게 한정된다. 중국 역시 별 다를바가 없으며, 프랑스는 불과 몇 개 대학으로 제한되어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의 공통점은 창작능력의 우수함은 물론, 분명한 자신의 철학과 개성을 발산할 수 있는 시대정신으로 무장되어있다. 활발한 토론과 세미나, 독서습관과 졸업후를 대비한 실질적인 현장연계가 이루어져 입학에서부터 우수한 두뇌들을 확보하고 치열한 경쟁을 배워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 작가를 배출하는 분포가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비평가나 기획전문가들의 역할이 작가들에게 막대한 지원군이 되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 하나의 코드만으로 천재성을 발휘하는 시대는 끝났다. 적절한 다중코드를 구사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교육은 대대적으로 개혁되어야만 한다.

〈경희대 교수·미술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나 훈

학교급식 새 쌀로 공급해야

쌀은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식량이자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민족의 영혼이다.

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은 감소했을지 모르나, 세계적으로 쌀 생산이 인구증가율을 쫓지 못하는 지금 식량안보차원에서 쌀 생산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수입 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고품질 쌀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고품질의 쌀도 소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그간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산 수입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업인으로 하여금 유기농과 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쌀 생산만을 장려했다.

그러나 소비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

고품질 쌀 공급에 대한 관리 감독과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학교급식이 품질 낮은 재고쌀에 의존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에 재고쌀부터 없애야 한다.

청소년들이 우리 쌀로 지은 밥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일부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학교급식에 눈을 뜨고 일찌기 우리농산물과 친환경쌀을 사용하기로 제정하고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것 또한 대법원이 조례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기에 고품질 친환경 쌀 소비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학교 급식용 농산물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적용 대상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WTO에 제출했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효력이 있고 WTO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학교급식의 운영을 비영리로 직접 수행토록 해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있다.

사실, 고품질의 친환경 쌀의 가격은 커피나 라면 보다도 못하다.

친환경 쌀이 80kg 1가마당 16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밥 한 그릇(100g)은 200원으로 재고미 100원(80kg 8만원), 커피 한잔 300원, 라면 한 개 550원과 비교하여 보면 얼마나 저렴한가를 알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26만1천명으로 한끼 소비량 100g과 190일의 학업 일수를 감안하면 연간 4천959톤이 소비 되며, 친환경 고품질의 쌀이 소비될 경우 연간 9억의 쌀시장이 형성되어 날로 쇠퇴해가는 농업을 되살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당장 4월부터는 값싼 수입 쌀이 우리 밥상에 오르게 돼 있다.

지금, 광주시와 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함께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해 청소년들이 친환경 고품질의 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농업인을 돕는 상생의 쌀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쌀의 가치도 되찾게 될 것이다.

〈송정농협 조합장〉

기 고

김 동 화

여수~광양간 도로 개설 서둘러야

최근 광양만권에서 여수~광양간 도로건설을 교량으로 할 것인지, 지하터널로 할 지 여부를 놓고 여론이 뜨겁다.

지금 광양만권은 컨테이너항만과 광양제철, 여수국가산단, 율촌지방산단등의 활성화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2012 여수 해양엑스포의 유치성공을 위해 민·관이 다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이나 부산, 광주 등 대도시권과 연계할 수 있는 여수~광양~전주간 및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여수공항 추가확장 및 국제공항 승격, 전라선 전철화 등 SOC기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 여수~광양간 도로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항만이용의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컨테이너항만 이용에 안전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량공법으로 가설하는 것은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특수 교량가설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 되어있다.

둘째, 공사기간동안 항만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교량으로 가설할 경우 선박통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지만 침매터널로 시공할 경우에는 터널 폭 26.5m, 높이 9.75m 길이 180m 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세그먼트(지상에서 미리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를 바지선으로 운반하여 해저에 투하시켜서 터널을 연결 축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수년의 공사기간동안 우회 항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구간에는 선박 통행이 통제되어야 하므로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따른다.

셋째, 경쟁력있는 광역도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이 도로는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항만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 광양만권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료·숙박·레져문화 등 정주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

만약 침매터널로 변경할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재실시,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최소한 2년 이상의 많은 시일이 더 소요된다.

넷째, 세계적 항만에 걸맞는 랜드마크(상징물)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도시에는 저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권에서도 어둡고 공기가 탁한 지하터널보다는 웅장하면서도 상징적인 교량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경제적인 공법이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전남도의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의하면 교량에 비해 침매터널로 시공할 경우 1.4배 이상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술적 분석이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교량공법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상과 같이 항만이용의 안전성, 공사기간중 항만이용의 지장여부, 도로개설의 시급성, 광양항의 상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침매공법에 의한 해저터널 보다는 교량으로 하는것이 모든 면에서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안개낀 도로 운전땐 서행·안전 운전하길

아침·저녁 짙은 안개가 끼면서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높다. 야외 나들이 인파가 늘면서 주위가 요망된다.

몇 미터 앞도 분간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안개등도 큰 도움이 못되는 경우가 많다.

안개길 주행시에는 속도가 조금만 올라도 자기 차선을 잃어버리기 쉽고, 시골길에서는 경운기나 각종 농기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차량운전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운전자 자신에게 더 해로울 수가 있다.

또한 비상등을 켠채로 서행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시야를 확보하는 목적과 더불어 다른 차들에게 내 차량의 존재를 알리며 운전해야 한다.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과속은 삼가해야 한다.

▲이태호·인터넷 독자

대형 할인점 시설물 안전 고려해야

얼마 전 부인, 3살난 조카딸과 함께 집 인근 대형 할인매장에 쇼핑을 갔다.

지하 식품매장 시식코너를 지나던 중 조카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하마터면 스테인리스로 각이 진 시식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를 긁힐 뻔했다. 자칫 크게 다칠 뻔한 상황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진 매장 진열대를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부드럽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나무를 이용해 부드럽게 하는데 비용도 별로 들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어린이 안전사고는 부모와 동행하는 어른들이 신경써야 하지만, 할인점 등 고객의 입장을 살피고, 꼼꼼이 챙기는 것이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첫 걸음인 것 같다.

▲차형수·인터넷 독자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 설

위헌적 新聞法, 매체환경 변화에도 뒤졌다

지난 6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이른바'조·중·동'이 청구인이 돼 제기한 신문관계법(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면서 공개 변론을 연 것은 새만금 사업 공사재개여부등 국가적 관심사에 국한되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곧 신문법 위헌심판청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와 재산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들은 신문사가 감시·비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서 공익을 위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와 언론인의 윤리적 의무인 공정보도까지 법적으로 강요하는 신문법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신문의 기능을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지, 그리고 그 강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론이 많다.

우리가 문제삼는 조항은 '조·중·동' 등 중앙일간지의 첨예한 이익이 걸린 신문법 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간신문사의 시장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지정)조항 뿐만 아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조항들도 문제다. 신문법 제15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신문사가 뉴스통신이나 방송매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체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매체환경변화를 보면 이 조항은 억지다.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정보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미디어 통합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문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의 변화는 고려해야 한다.

헌재는 통상적 헌소 처리기간인 6개월을 훨씬 넘겨 13개월째야 변론을 시작했다. 늦은 만큼 철저한 심리를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않는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기대한다.

검찰 현대차 수사 오래 끌어선 안된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정몽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뜻을 비치는 등 수사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차 그룹이 떳떳치 못한 로비에 의존하는 구태경영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명경영의 중요성을 절감했던 것이 불과 몇년 전일이다. 현대차그룹 뿐만이 아니다. 삼성과 두산 등 내로라하는 재벌 총수들도 정경유착과 탈세, 내부자 거래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재벌총수 일가가 비상장 자회사를 만들어 부를 축적해 온 사실 역시 참여연대 조사로 최근 밝혀졌다. 이쯤되면 재벌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좋을리 만무하다. 거듭되는 재벌들의 비리와 탈법 경영이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업인의 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재벌에 대한 솜 방망이 처벌은 더이상 되풀이 되서는 안될 일이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수사는 시일을 오래끌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엄청난 지각변동의 회오리를 겪고 있다. 부동의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 GM이 주춤거리는 사이 일본과 유럽 자동차 업계의 추격이 심상치 않다. 향후 몇년간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대차 그룹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 세계 자동차 업계 빅5에 올라서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현대차 그룹이 휘청거리면 지역 제조업 총생산의 3분의 1을 맡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대한 지속적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無 等 鼓

무기명의 사기극

양면성은 사람만이 가진 특성이다. 생각과 행동을 달리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다. 이 기술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은 속고 속이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즉 리바이어던(Leviathan) 일색이 됐는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투표 행위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양면성은 드러난다. 특히 투표자의 이름을 밝히는 기명투표와 그렇지 않은 무기명 투표의 결과가 천양지차로 다른 경우는 허다하다.

지난 6일 대한민국 국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표결 결과를 내놓았다. 바로 국회를 통과한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다. 국민들은 아마 최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최 의원 성추행 사건을 놓고 온갖 법석을 떨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추론이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다. 재적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여한 이 투표에서 찬성은 149표. 사퇴촉구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숫자 151명에도 못 미친다. 반대 84표, 기권 10표, 무효 17표 등 총 111명의 국회의원들이 최 의원 사퇴 촉구에 동참하지 않았다. 찬성률은 고작 57.3%였다.

투표 결과는 바로 무기명의 가면 안으로 숨어버린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낮은 동류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 추행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고 목청 높였던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이런 와중에 예상치 않은 스타(?)가 탄생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이다. 그는 "(성추행)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나도 죄인이다. 나는 기권표를 던졌다"고 고백했다. 이 대변인의 커밍아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무기명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이는 국회의원보다는 낫지 않는가.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